



발행일 2020년 1월 28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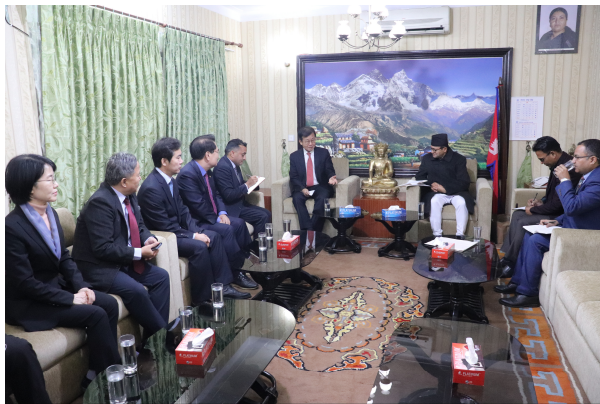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Parliamentary Diplomacy: Trends and Analysis

I. 한 - 남아시아 의회외교포럼 방문외교



한-남아시아 의회외교포럼(회장: 원혜영 의원)은 2020년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6박8일 일정으로 네팔과 인도를 방문하였다.

동 대표단은 네팔을 방문하여 거네스 프러사드 티밀시나(Ganesh Prasad Timilsina) 상원의장 등과 면담하였으며, 한·네팔 양국 간 관계 발전 및

의회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인도 방문에서는 집권당인 인도국민당(Bharatiya Janata Party, BJP) 산하 썬크탱크 '무커지 연구소(Dr. Syama Prasad Mookerjee Research Foundation)'를 방문하여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한-남아시아 의회외교포럼 대표단은 이번 방문 외교를 통해 우리나라와 네팔 및 인도 등 남아시아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향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발전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개발, 고용 및 관광 협력 등 한·남아시아 간 핵심 현안을 제기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점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II. 2020년 일본의 대외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과제

1. 들어가며

2012년 12월 제2차 아베(安倍晋三)내각 출범이후 일본 경제는 지속적인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아베 내각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40%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¹⁾ 이를 배경으로 아베 총리는 2019

년 11월 20일 일본 역사상 최장의 재임기간 기록을

1) 2012년 12월 기준 일본의 명목 GDP는 494조 9,572억 엔이었으나, 2018년 12월 기준 547조 1,255억 엔으로 증가하였으며,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유효구인 비율은 2012년 12월 0.83배에서 2019년 1.57배로 증가하였다. 또한 2019년 12월 일본경제신문(日本經濟新聞)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각지지율은 50%, 부지지율은 41%로 나타나고 있다. 「內閣支持率, 横ばい50%、世論調査」, 『日本經濟新聞』, 2019年 12月 23日, 1面.



보유한 총리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총리는 아직까지 일본의 역대 장기정권이 만들었던 나카소네(中曾根 康弘) 정권의 ‘국철개혁’,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정권의 ‘우정민영화’와 같은 대표적인 업적을 성취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까지를 임기로 하고 있는 아베 총리가 어떠한 대표 업적을 남길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1월 정기 국회에서의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이 글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제201회 정기국회에서의 아베총리의 외교 분야 시정방침 연설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2020년 일본의 대외정책 전망

1) 외교 분야 시정방침 연설의 주요 내용

아베총리는 이번 시정방침 연설에서 올해 외교정책의 목표로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 계기 전후 외교의 총결산’을 들고 있다. ‘전후 외교의 총결산’은 냉전적 질서가 남아있는 동아시아에서 남겨진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른 외교 분야 시정방침 연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²⁾

첫째, 2002년 발표된 ‘북·일 평양선언³⁾’을 기초로 북한과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

산하고 북·일간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납치피해자 문제 해결을 목표로 양국 정상간 조건 없는 대화를 추진할 것을 밝히고 있다.

둘째,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이 엄중한 가운데 근린 국가에 대한 외교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한국은 본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언급하고 있다.

셋째, 러시아와의 관계는 1956년 선언을 기초로 교섭을 가속화하여 영토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넷째,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정상 간 왕래에 더하여 제 분야에서의 교류를 심화시키고, 성숙한 중·일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섯째, 미·일 동맹의 공고한 기반 하에 유럽, 인도, 호주, ASEAN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정방침은 대체로 예년에 비해 한국에 대한 표현이 개선되고, 한·일 관계를 보다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로 2019년 아베총리의 시정방침 연설의 경우, 한·일 관계의 악화를 배경으로 한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이에 반해 이번 시정방침 연설에서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에 앞서 한국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기본적 가치의 공유’ 및 ‘전략적 이익의 공유’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일본의 공식 문건에서 한국에 대해 ‘기본적 가치의 공유’ 및 ‘전략적 이익의 공유’ 등의 기술은 사용되지 않았다.

한편, 아베 총리는 시정방침 연설에서 이번 국회에서의 헌법 개정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2018년 3월 25일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헌법 9조 내

2) 首相官邸, “第二百一回国会における安倍内閣総理大臣施政方針演説”(최종검색일: 2020.1.21.), <https://www.kantei.go.jp/jp/98_abe/statement/2020/0120shiseihoushin.html>. 이번 외교 분야 시정방침연설에서 아베총리는 ‘전후외교 총결산’을 목표로 북한, 한국, 러시아, 중국, 미일동맹 순으로 언급하고 있다.

3) 2002년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총리와 김정일 위원장은 제1차 북·일 정상회담(평양)에서 양국은 핵·미사일 문제, 납치문제, 과거사 청산문제의 일괄타결을 통하여 국교를 수립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였다.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교육의 충실', '참의원 선거 합구(合區)해소' 등 헌법 개정 4개 항목을 발표하였다. 특히 아베총리는 '헌법 9조 개헌'을 개인적인 비원(悲願)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헌법개정안에 대한 의회 내 조정이 부진한 상황이며 개헌에 비판적인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베총리의 임기 내 개헌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일본의 대외관계 전망

높은 내각지지율·안정적인 경제지표·세력이 약한 야당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아베 내각은 2020년에도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가 '전후 외교의 총결산'의 업적을 염두에 두고 시정방침 연설에서 언급한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전망해 볼 수 있다.

첫째, 안보 정책 면에서 아베 내각은 미일동맹을 유지·강화하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비전하에 일본의 안전보장 협력국의 범위를 호주, 인도, ASEAN 국가 및 유럽, 아프리카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기조는 202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0년은 미·일 동맹 개정 60주년에 해당하는 해이며, 주일미군의 주둔비용과 관련된 협상이 진행될 예정으로서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과의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2019년 9월 체결된 「미·일 무역협정」이 2020년 1월 1일 발효되면서, 미국산 농산품 및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준으로 인하되었으며, 일본산 에어컨부품 및 연료전지 등의 관세가 인하되었다. 2020년에는 양국 간 포괄적 협정을 위한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일 관계는 동중국해 문제 등 갈등이 있지만, 2020년 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정부 간 관계개선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아가 새로운 양국관계를 규정하는 제5의 중·일 관계 문서가 발표될지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까지 중·일 간에는 ① 국교를 정상화한 1972년 「중·일공동성명」, ② 분쟁 해결을 무력에 호소하지 않기로 한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③ 정상간 상호방문 및 우호협력 파트너십을 명기한 1998년 「중·일 공동선언」, ④ 전략적 호혜관계를 추진하기로 한 2008년 「중·일 공동성명」 등 4개의 문서가 양국관계의 기초가 되고 있다.

셋째, 러·일 관계에서 아베 총리는 1956년의 「일·소 공동선언」을 기초로 양국 간 영토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러·일관계의 진전은 대체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베총리는 하보마이(齒舞), 시코탄(色丹) 등 2도 반환 및 공동 경제활동 추진입장인 반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은 북방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넷째, 아베 총리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전제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희망하고, 나아가 북·일간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밝히고 있으나, 2020년 전격적인 북·일간 관계 개선이 추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요구하는 납치피해자 문제의 진전이 사실상 어렵고, 북한이 일본의 과거사 청산과 대북 적대정책 철회 없이는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19년 9월 이후 일본 의사회 등 민간차원의 방북단이 파견되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해서는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한·일 관계 현황 및 대응과제

2020년 1월 현재 한·일 관계 현안은 강제징용피

해자문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조치,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종료문제 등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우리 정부는 2019년 11월 22일 GSOMIA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침을 일본 측에 전달하였다. 현 시점의 안보환경 및 한·미 관계 등을 고려할 때 GSOMIA 종료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되고 있다.⁴⁾ 아울러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중 1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개별허가제에서 특정포괄허가제로 규제조치를 완화하였으며, 지난 12월 24일 1년 3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악화일로의 양국 관계는 현재 소강상태에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한편, 강제징용피해자 문제는 여전히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제징용 피해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측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의 현금화가 2020년 상반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기업 자산이 매각될 경우, 일본이 대항 조치를 하고 여기에 다시 한국이 조치를 취하게 되면 양국 간 경제 전쟁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나아가 일본 기업들이 원고들의 자산매각 조치를 부당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투자자보호절차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이 사안이 국제법적 분쟁절차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한·일관계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일 간 과거사 문제와 안보문제, 경제문제에 대하여 분리 대응하는 원칙을 확고히 하여 사

안 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는 갈등사안이 많고 해결이 쉽지 않으며, 점화하기 쉬운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과거사문제, 안보문제, 경제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두고, 대응하면서 양국 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강제징용피해자 문제 해결에 대한 국회 내 논의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지난 12월 18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강제징용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외에도 20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강제동원피해자관련 법안은 모두 13건에 이른다. 더 이상의 한·일관계의 악화를 막기 위한 국회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또한 작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법마련을 위한 국회차원의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한·일 의회 간 대화를 더욱 활성화하여 양국 간 이견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급한 현안인 강제징용피해자문제 해결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을 비롯하여, 최근 한·일 변호사들과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공동협약의 제안’ 등에 대해 양국의 국회가 중심이 되어 진지한 의견교환을 할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 악화로 2019년에 개최되지 못한 <제3회 한일의회미래대화>를 근시일 내 재개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박명희 입법조사관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은 국회의원의 의회외교 활동 동향 및 비전에 대해 주간으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

4) 조양현·김양희·김중학, 「일본」, 『2020국제정세전망』,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9, p.80.

